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일괄 국가배상 검토”

“현행법 부족해 새 법으로 보완”
윤 대통령 “실체적 진실 파악 중요”
국정조사 선 굵고 경찰수사 힘 신기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일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하며, 경찰의 강제·과속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거듭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이른바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경영진 민노총 출신...MBC 민영화 해야” 野 “尹정부 불통의 민낯...청와대로 돌아가라”

도어스테핑 중단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는 22일에도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이 'MBC 탓'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불통과 폐쇄의 상징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며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MBC 경영진과 보도국 구성원들을 향해 “전부 민노총 출신” “조직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라며 내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출신) 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라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강조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중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MBC 보도에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한다”며 슬리퍼를 신고 도어스테핑에 참여한 MBC 기자에 대해서도 “무례하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둔했다.

김 비대위원은 다만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기자들을 만나든가, 다른 나라처럼 한 달에 한 번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불통’을 주장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각각 살아야 하는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소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차종·품목 확대는 불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 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에게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윤리 성 정책위의장은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대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유승민 “尹정부 6개월, 뭐가 변했나...저출산 해결에 명운 거시라”

인구·대북정책 잇단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정부의 인구정책과 대북정책을 잇달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뭐가 변했습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라며 “생각해보면 용산으로 이사 간 거 말고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지 않나”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거시라”며 “출산,

보육,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개혁의 진심’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의 길로 하루빨리 매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 2022년 11월 21일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장애인가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새 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 버스 천교 하차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